



조합원 60% “경영진의 중간 성적표는 보통” 합격점도 낙제점도 아닌 점수...“더욱 분발하란 메시지”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연합뉴스 경영진이 노조원들로부터 받은 중간 성적표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진이 1년 반 동안 크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지만, 조합원들이 남은 임기 동안 경영진에게 더욱 분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노조 규약 제 11장(경영진 평가)에 따라 조성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취임한 지 1년 7개월째에 접어든 지난 6~11일 11일간 전체 조합원 568명(참여율 69.72%)을 대상으로 경영진 중간평가를 시행했다.

보도의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인사, 사내민주화,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영진의 성적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6%인 236명이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참여한 조합원 10명 중 6명이 경영진에게 잘했다는 합격점도, 그렇다고 못했다는 낙제점도 아닌 ‘유보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보통’을 제외한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 중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조금 더 많았다.

‘매우 잘못했다’(5.56%), ‘잘못했다’(17.42%) 등

부정 평가는 22.98%로, ‘매우 잘했다’(0.25%), ‘잘했다’(16.92%)를 합친 긍정 평가(17.17%)를 앞섰다.

경영진에게 합격점도 낙제점도 주지 않은 ‘보통’ 수준의 평가는 세부 항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0명중 4명 “보도 신뢰도·공정성 불변”

연합뉴스 보도의 신뢰도와 공정성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대로’란 응답이 41.41%(164명)로 가장 많았다.

신뢰도와 공정성 불변의 이유로는 정권 눈치보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배·예산구조가 바뀌지 않았고 눈에 띄는 신뢰도, 공정성 개선책이 없다는 점을 든 응답자가 많았다.

그럼에도 현 경영진 취임 후 신뢰도, 공정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았다.

‘매우 나아졌다’(2.02%), ‘나아졌다’(37.37%) 등 긍정 평가는 39.39%여서 ‘나빠졌다’(8.84%), ‘매우 나빠졌다’(3.03%) 등 부정 평가(11.87%)의 3배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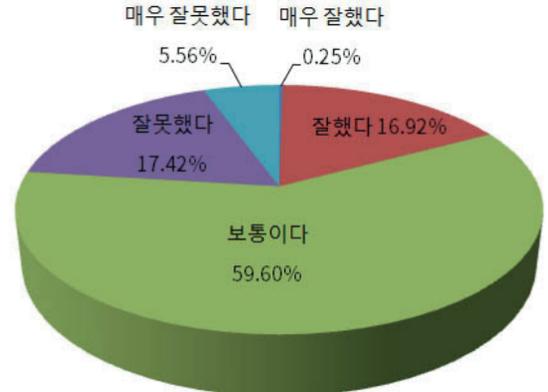
개선됐다는 평가를 한 이유로는 상당수 조합원들

이 편집총국장제 복원과 편집권 독립 강화,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 감소, 현장 기자의 의견 존중, 경영진과 구성원의 의지 등을 꼽았다.

반면, 나빠졌다고 평가한 조합원들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과도한 간섭, 취재역량 저하, 보도의 질 하락, 불공정한 인사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박노황 전 사장 시절인 재작년 10월 응답자의 70%가 ‘보도가 덜 공정해졌다’고 답

보도의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인사, 사내민주화,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영진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2면에 계속

시민대상 콘텐츠 개선 위한 첫 심층면접 조사 신뢰하는 언론사 없어...연합의 사실기반 정보는 긍정적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10월 리서치 전문회사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합뉴스 콘텐츠 개선과 신뢰도제고를 위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했다. 연합뉴스지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콘텐츠에 관한 FGI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참가자들은 가짜뉴스와 속보경쟁으로 인한 오보 등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합뉴스의 콘텐츠를 신뢰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갤럽이 주관한 이 조사는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공을 위한 방향성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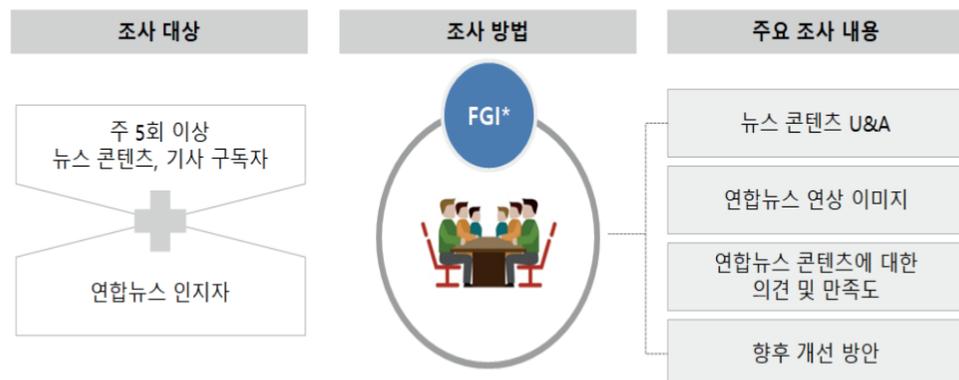
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기획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참가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들로, 주 5회 이상 뉴스 콘텐츠를 구독하며 연합뉴스가 어떤 회사인지 개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연령별 5개 그룹 대상

연령별로 7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 5개 그룹을 대상으로 ▲ 연합뉴스에 대한 인식 ▲ 연합뉴스 콘텐츠 평가 ▲연합뉴스의 향후 방향성 탐색 ▲콘텐츠 이용행태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조사는 연합뉴스지부가 주관하고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비용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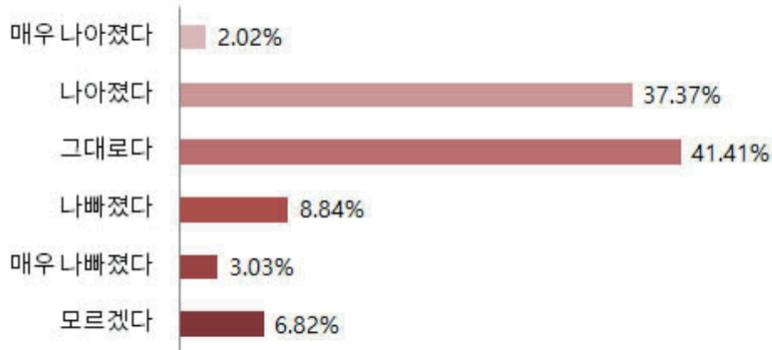
조사결과 시민들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 ▲ 기사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신속하게 속보를 제공하는 점 ▲국제뉴스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을 연합뉴스의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속보로 인한 오보 및 빈약한 내용 ▲타 언론사에 비해 콘텐츠가 촌스럽고 신선하지 못하며 재미없는 점 ▲오보 및 오역에 대한 경험으로 연합뉴스 전체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이 약점으로 꼽혔다.

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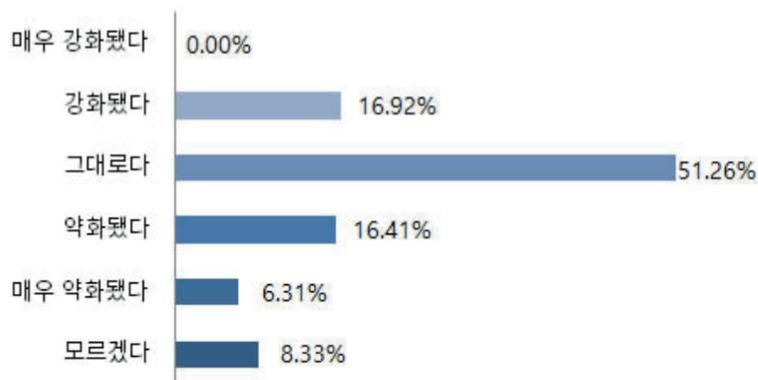


☞ 1면에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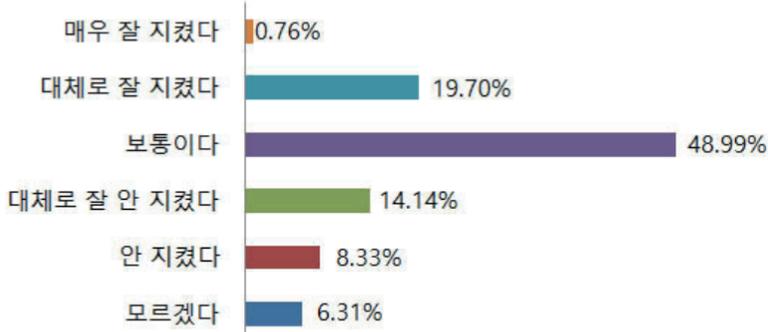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연합뉴스 보도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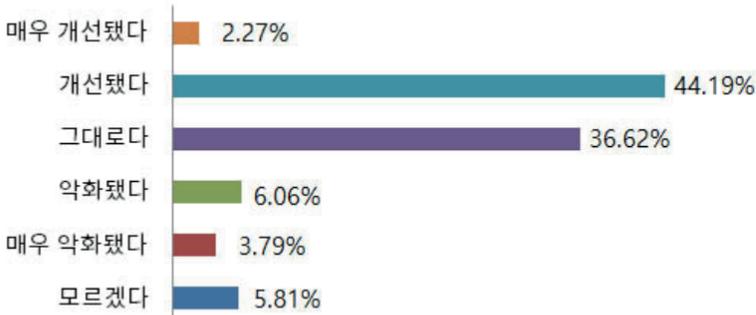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연합뉴스의 콘텐츠 경쟁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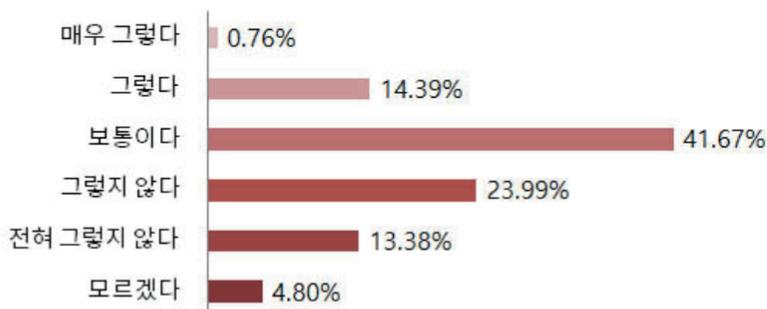
조성부 사장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내용을 얼마나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사내민주화(의사결정구조 및 합리적 노사관계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 경영진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변한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크게 개선됐지만, 응답자의 52%가 보도 공정성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다소 후퇴한 것이다.

보도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39.14%), ‘현장 기자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는 조직문화’(37.88%)가 우선 순위로 꼽혔다.

‘투명한 취재원 확보 등 기사 제작 방식의 개선’(10.61%), ‘공정보도 감시를 위한 편집위원회 기능 강화’(8.08%)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콘텐츠 경쟁력도 2명 중 1명은 변화 못 느껴”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란 답변이 51.26%(203명)으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변화가 없는 이유로는 ‘정권 편향성 불변’, ‘변화나 혁신을 못 느껴서’, ‘언론의 독립성 확보가 없는 경쟁력 변화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서’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경쟁력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 중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약화됐다’(16.41%), ‘매우 약화됐다’(6.31%) 등 부정 평가(22.72%)가, ‘매우 강화됐다’(0%), ‘강화됐다’(16.92%) 등 긍정 평가(16.92%)를 앞질렀다.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는 주52시간제 도입, 인력 부족, 관습을 타파하지 못하는 취재 관행, 취재 기사 작성 능력의 저하, 근로 의욕 저하, 부적절한 인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고, 포털 및 미디어 환경변화 등 외부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반면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로는 공정한 보도와 콘텐츠의 질 향상, 외국어뉴스 강화, 유튜브 등 콘텐츠 활용방식의 다양화 등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공약 이행도(3면 공약표 참조)에 대한 평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2명 중 1명 가까이가 보통(48.99%)이라고 평가한 것을 제외하면 부정평가(22.47%)가 긍정평가(20.46%)보다 약간 더 많았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6.31%였다.

“사내 민주화는 개선”

조합원들은 세부 항목 가운데 사내 민주화(의사결정 구조 및 합리적 노사관계 개선 노력 등) 측면에서 경영진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민주화에 대한 평가 결과, ‘개선됐다’(44.19%)는 의견이 ‘그대로다’(36.62%)를 앞질렀다.

‘매우 개선됐다’(2.27%)까지 포함하면 46.46%가 긍정평가를 내려 ‘그대로’란 평가는 물론, ‘약화됐다’(6.06%), ‘매우 약화됐다’(3.79%) 등 부정평가(9.85%)를 압도했다.

“인사·경영능력 등에 대한 평가는 박해”

반면 인사와 경영능력, 소통지수,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통’(41.67%)이 가장 많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23.99%), ‘전혀 그렇지 않다’(13.38%)를 포함해 37.37%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기준 없는 무원칙한 인사’, 지연·학연, 파벌 중심의 인사, ‘인맥·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를 꼽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반면 ‘매우 그렇다’(0.76%), ‘그렇다’(14.39%) 등 긍정 평가는 15%대에 불과했다.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은 ‘보통’(50.25%)이라고 평가했지만, ‘우수하다’(11.77%)보다는 ‘부족하다’(34.09%)는 쪽이 3배 이상 많았다.

“사내 소통지수도 평균 이하”

사내 소통지수도 평균점 이하였다. 상·중·하로 매긴 점수를 보면 ‘중’이 56.06%로 가장 많았지만, 상·하만 놓고 보면, ‘하’(38.64%)가 ‘상’(3.7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사내 소통이 활발해지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냐는 질문에는 ‘실무자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는 조직문화’(47.73%)가 첫손에 꼽혔고 ‘간부와 사원, 선후배 간 신뢰 강화’(26.01%),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활성화하는 문화 정착’(18.43%)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반면, ‘경영진과의 상시적인 대화채널 구축’(5.3%)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영진 출범 이후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됐느냐는 질문

☞ 2면에 이어

에도 보통 이하 쪽에 무게가 실렸다.

‘강화됐다’(10.1%)는 평가에 비해 ‘변화없다’(45.96%), ‘약화됐다’(28.79%), ‘매우 약화됐다’(7.58%) 등의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이 많았다.

경영진이 가장 잘한 점, 못한 점은?

주관식 문항으로 경영진이 취임 후 가장 잘한 점과 가장 잘못된 점을 물은 결과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제시됐다.

경영진이 취임 후 가장 잘한 점으로는 편집권 독립 강화, 적폐청산 노력, 불합리한 차별 해소,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 전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이 꼽혔다.

가장 잘못된 점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인사, 콘텐츠 경쟁력 약화, 회사 기강 해이, 노동신문 대응 실패,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부족 등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조성부 사장 후보시절 공약사항>

▲ 콘텐츠의 신뢰회복

편집총국장제와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를 부활시켜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 나가겠다.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의 원칙으로 인사를 단행하겠으며 전문성, 소통 능력 갖춘 인재를 발탁해 연구와 패거리 정서를 완벽하게 배제한 인사를 제도화 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하겠다. 비리를 근절하고 제도적인, 법적인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기동타격대와 같은 추적보도팀을 만들겠다. 게이트 키퍼 역할을 키우고 전문기자제로 깊이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겠다.

연합뉴스 콘텐츠의 3대축인 북한, 국제(외국어뉴스) 지방뉴스를 강화하겠다. 북한부를 부활하고 평양상주 특파원 제도를 추진하겠다. 동북아센터를 ‘동북아평화연구소’(가칭)로 확대 개편하겠다.

특파원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문뉴스 서비스를 강화해 글로벌 영문뉴스에이전시로 연합뉴스를 키우겠다.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해 지방뉴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포럼을 만들어 지역 뉴스의 어젠더를 주도해 나가겠다.

▲ 언론 지형 개혁의 선도자

연합뉴스는 적폐청산과 개혁의 견인차 되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팩트체크팀을 만들겠다. 언론사간의 대화를 상설하고 지방 언론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 연합뉴스TV를 개혁해 신속, 공정, 객관적 보도로 신뢰를 회복하겠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아시아판 CNN’으로 육성하겠다.

▲ 차별제거/건설적 노사관계/미래비전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회사 공동체를 구현하겠다.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성임원을 기용하는 등 남녀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성추행을 엄단하겠다. 다른 요인보다 인성과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소통으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노조를 회사 운영의 한 축으로 삼겠다.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정통 저널리즘의 가치를 높이는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에 따라 텍스트 중심의 언론사에서 동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허브로 만들겠다.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연합뉴스 혁신위원회를 가동해 6개월 내 ‘혁신 보고서’를 내고 전사적인 통합을 달성하겠다.

☞ 1면에 이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같은 회사로 인식

특히 시민들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를 동일한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합뉴스TV가 계열사 또는 자회사라고 알고 있는 응답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동일한 콘텐츠를 연합뉴스는 ‘활자’로, 연합뉴스TV는 ‘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TV시청률이 높은 60대의 경우, 대다수가 연합뉴스TV의 콘텐츠를 연합뉴스의 콘텐츠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연합뉴스지부가 노보에서 회사와 뉴스통신진흥회에 연합뉴스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조사실시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 3월에는 회사와 진흥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연합뉴스TV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 사진 논란과 인공기 CG사건까지 겹치면서 지난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36만 4천920명이 국민청원에서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5월 9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와 역할에 관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가한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속보경쟁보다는 시비를 가리는 정확한 콘텐츠 제작과 편집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콘텐츠에 대해 시민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지부는 연합뉴스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시민들과 소통으로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민단체들과의 토론회를 거쳐 연합뉴스 보도의 문제점을 논의하자고 회사와 진흥회에 제안했다. 진흥회는 적극적으로 연합뉴스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회사는 11월 OANA총회 개최 이후 연합뉴스 노사, 진흥회 등 3자 토론회는 가능하지만 시민단체 참여 토론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지부는 시민단체들과의 토론회 앞서 시민대상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회사와 진흥회가 조사비용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 조사에 참여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연합뉴스 노사, 진흥회 3자가 콘텐츠 개선을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시민단체들과 토론회도 계획

연합뉴스지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언론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집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집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지적과 현실과의 틈을 좁히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연합뉴스가 진정한 공영언론사로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언론사로서 우뚝 서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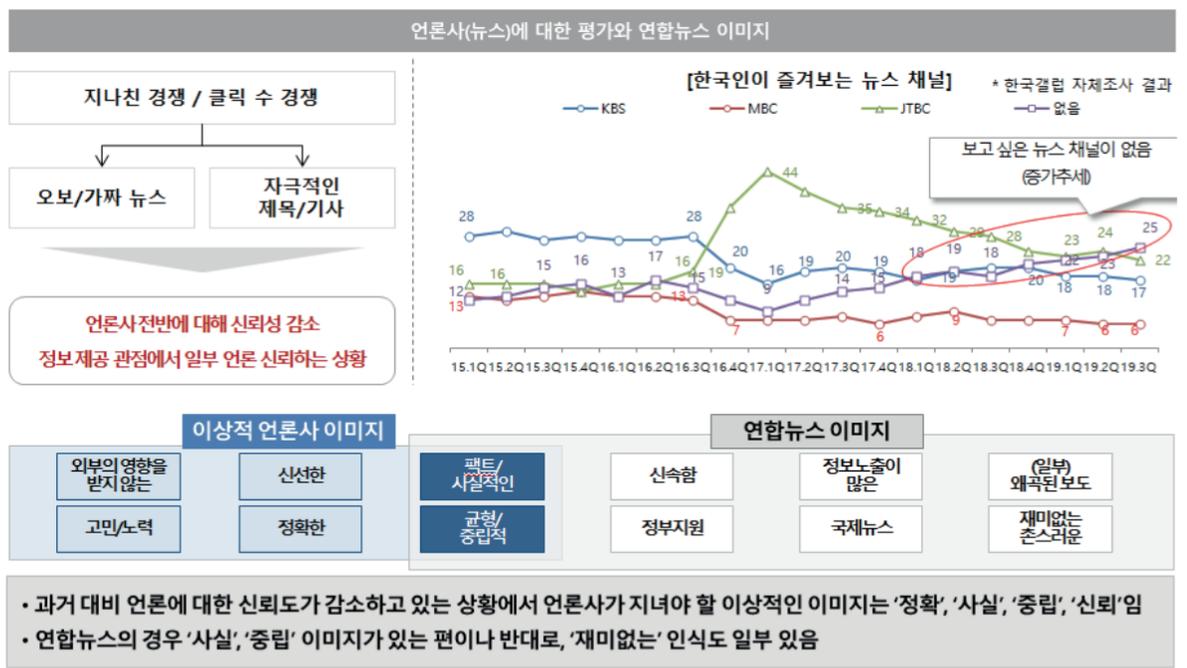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연합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공영언론사로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영언론사로서 연합뉴스가 뉴스제작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구독료 폐지를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제기한 문제들은 올바른 지적이기도 하지만, 몇몇은 지나치게 과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고 제작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책상 앞의 비판이기도 하다.

집담회가 끝나면 연합뉴스지부는 연합뉴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회사와 뉴스통신진흥회에 시민단체들과의 토론회를 제안할 생각이다. 더 나아가 연합뉴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에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할 계획이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언론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6개 언론관련 시민단체를 규합해 지난 7월 23일 출범시킨 조직이다.



"속보·분야의 다양성·국제 보도가 연합의 강점"

오보 등 사고 대처는 미흡 의견...연합뉴스TV 콘텐츠와 구분 모호

고객사가 아닌 일반 독자들은 연합뉴스의 콘텐츠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연령대를 막론하고 속보와 다양한 분야의 취재, 국제 뉴스 등을 연합뉴스의 강점으로 꼽았다.

속보 부문에서는 1보·2보·3보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특파원 기사 등 국제 보도 외에도 시각 자료 등 전반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양이 많다는 평가가 많았다.

타 언론사 대비 콘텐츠가 자극적이지 않다는 점 또한 공통적인 강점으로 꼽혔지만 젊은 층에 어필할 만한 사실 기반의 재미있는 콘텐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합의 약점으로는 오보와 오역 사례들이 꼽혔다. 대표적으로는 연합뉴스TV의 인공기 CG 방송사고와 촛불집회 참가자 사진 전송 사고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오보가 발생하는 경우의 정정 혹은 삭제 조치 외 회사 차원의 사과문 발표 등의 대처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추측성 기사 작성 유형도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꼽혔다.

정치 보도, 타사 대비 '중립적'이라는 평가 지배적 독자와 개별 기사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 있어

정치 보도에 대한 평가는 타사 대비 전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독자의 정치성향과 기자 개인의 성향, 당시의 정권 변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실에 기반을 둔, 중립적인 시각이 유지되는 편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보다 중립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자주 보는 편입니다." (20대)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받으니까 정부 편향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연합뉴스는 AP나 교도통신이나 전 세계 언론사와도 공조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공정하지 않나 싶다." (20대)

중립성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보도 방향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했다.

"중립적인 논조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국가기간통신사라 그런지 정권에 따라 보도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50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연합의 보도 방향은 여전히 보수적이지 않느냐는 시각도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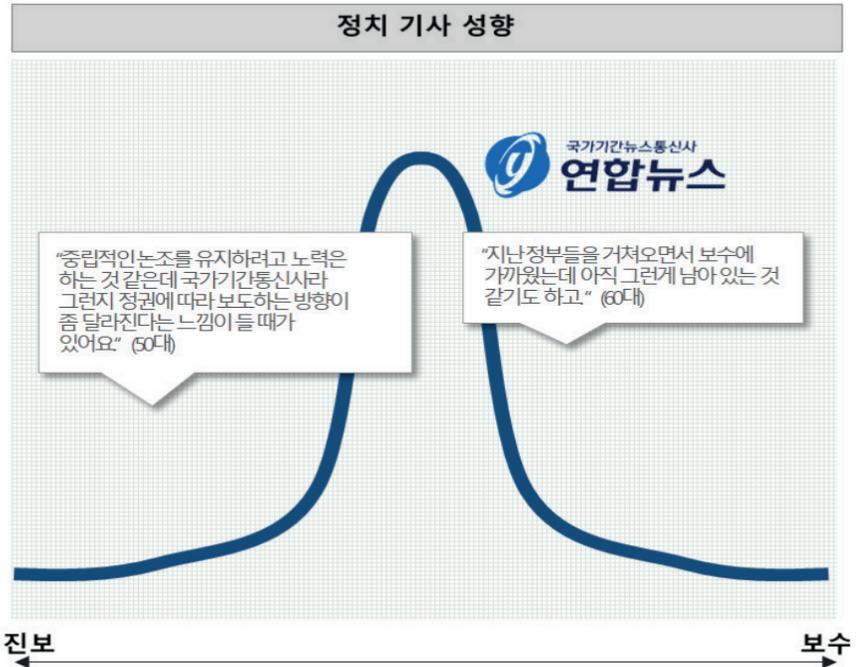
"지난 정부들을 거쳐오면서 보수에 가까웠는데 아직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60대)

참가자들은 정권과 관계없이 정치 보도에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자극적인 제목 지양 필요성과 '패스트트랙', '공수처' 등 일반 독자에게 생소한 용어에 대한 정리와 설명이 기사에 포함해 주길 희망했다.

경제 현상 단면 전달 충실 큰 흐름 파악하는 데는 미흡

경제 기사의 경우 경제지들이 전망·분석·전문가 의견 전달 등 깊이 있는 경제 보도를 보여주지만 연합은 당시의 상황의 단면을 전하는데 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기사의 표현 또한 어렵고 딱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독자 중심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통계 혹은 자료를 발표 기관의 전문 용어를 그대로 옮겨 적는 인상이라는 시각이다.



[개선 사항]

- 정권에 관계 없이 중립적인 시각 유지
-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자극적인 제목 지양 필요
예: 사모펀드 금융거래 추적 ... 조국 가족 일부 출금
→ 금융 거래 관련하여 '계좌에서 출금했다'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
- 어려운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
예: 패스트트랙, 공수처 등 용어에 대한 정리/설명기 기사에 포함되었으면 함

"9월 취업자수가 23년 만에 최대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가 통계를 올려주고 전문가의 한마디, 이게 기사 내용의 끝이었어요...그렇게 팩트만 제시하기 위해서 통계만 던져버리면 뭔가 뜨거운 감자를 던져주는,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대)

통계 수치의 시각화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추가적인 이미지 재가공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의 표와 그래프를 복사해 그대로 매핑하는

연합뉴스	VS	전문 경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제 현상/상황을 사실 그대로 파악하는데 용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만 제시하고 표현이 딱딱한 편 "연합뉴스는 소비자 물가지수는~으로 기사가 시작한다면 경제지는 오늘 마트에 갔다로 편하게 다가가요" (30대) 	콘텐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전망, 전문가 의견 등 깊이감 있음 • 콘텐츠가 재미있다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 기업적 성향 일부 보임 •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부족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친 기업적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화 부분 아쉬움 예: 보도자료의 표, 그래프 그대로 인용 	시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표현되는 경우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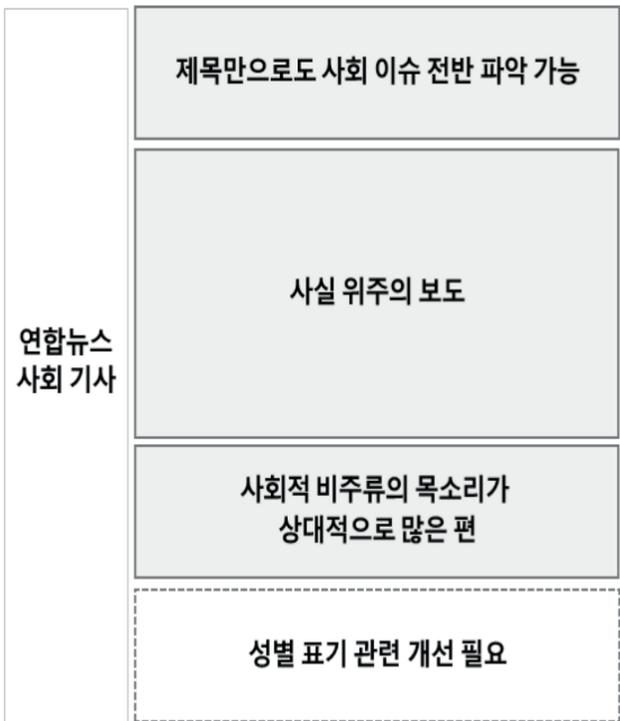
☞ 4면에 이어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어떤 기사의 도표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사이트에서 그대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도표 자체가 너무 보기 힘든 그런 거였어요.” (30대)

포괄적인 경제 현상 전달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미시적 분석의 노력도 강화해줬으면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가령 특정 사안을 보도할 경우 거시 경제와 더불어 부동산과 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특실을 짚어주는 보도 등을 다뤄줬으면 하는 주문이었다.

**사회 분야,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보도 필요 의견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도 많지만 더욱 강화해야**



사회 분야 기사의 경우 언론사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다른 영역 대비 개선 의견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눈에 띄었다.

사회 기사 경우 제목만으로도 해당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컸다. 사건, 판결 등 발생 기사의 경우 제목만으로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위주 보도로 공감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과 판단의 영역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사실 기반의 보도 유지에 대한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 단발성 스트레이트 사건 기사를 읽을 경우 사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면이라든가 교육면이라든가 클릭을 해서 보면 그것 갖고는 저희가 알 거리가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다시 나와서 다른 언론사를 봐야 하고...연합 뉴스에서 보이는 그 기사만으로는 알 거리가 다 충족이 안 돼요.” (50대)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에는 연합뉴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회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콘텐츠는 지속해서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또한, 입시제도 변화 등 교육 분야의 경우 대국민 관심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한 연재물 등을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제·팩트체크 ‘긍정적’...북한 보도는 국가기간통신사의 역할

연합의 콘텐츠 가운데 국제 뉴스 및 팩트체크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국제 분야 보도는 타사 대비 강점으로 인식됐으며 해외 통신사의 인용 보도 외 특파원의 직접 취재 확대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합뉴스 특파원이 해외에서 제일 먼저 속보를, 1보, 2보를 쓰는 것이 다른 언론사보다 확실히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하는 언론사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안 아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0대)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제 뉴스 외에도 국내 이슈를 해외로 전하는 외국어뉴스 기능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나타났다.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국가기간통신사이기에 다루야 하는 분야라는 인식이 강했다.

“세금을 써서 외국어로 많이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

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아깝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30대)

“(연합이) 북한 통신사하고 조인(계약)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실시간 연합뉴스를 보고, 통일부 관계자 외에는 가장 먼저 (북한뉴스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50대)

팩트체크 콘텐츠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특히 40대 이상에서 선호도와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단 젊은 층의 선호도는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순수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와 생활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접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최근 일주일간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인기 있는 미술품 전시를 한다고 정보성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냥 몇 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최대 규모, 작가들이 누구고, 어떤 그림 전시를 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스포츠 기사의 경우 연합의 외신 번역 수준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예 문화 분야의 경우 상대적인 노출도가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콘텐츠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인식되지 않았다.

연합 유튜브 콘텐츠에 긍정적 반응...홍보·노출 개선 필요

통통TV와 연통TV 등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관심사에 따른 호불호는 존재하나 콘텐츠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연합의 정체되거나 ‘존스러운’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이 많았다.

하지만 단순 재미 추구의 콘텐츠의 경우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연통TV의 경우 연합뉴스의 지적재산이 아닌 개인 콘텐츠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채널들이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되 연합뉴스라는 거대한 브랜드와의 연결고리를 놓아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향후 개선안으로는 콘텐츠의 적극적인 홍보를 손꼽았다. 아직은 타 언론사 유튜브 콘텐츠 대비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와 함께 홈페이지 내 노출 위치 변경 고려, 포털 등 기사 노출 시 영상 콘텐츠의 연동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통통TV 예전부터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내용도 충실하고 번역도 잘 되어 있는데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만 잘 되어도 ‘핫’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단 구석에 있을까.” (40대)

국제 뉴스 / 국외 정세 관련 + 북한

- 국제 뉴스 / 국외 정세 관련 뉴스의 양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타사 대비 강점으로 인식되는 영역
 - 해외 통신사 인용 보도 외 특파원의 직접 취재를 통한 보도 확대 희망
 - 국내 이슈를 해외 통신사에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도 있음
-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이나 국가기간통신사의 역할로는 인식
 - 정확한 보도에 대한 요구 있음

연합뉴스 전반적 평가

강점	약점
속보	오보
다양한 주제	오역
자극적이지 않은 콘텐츠	추측성 기사
팩트 체크	

공영언론사로서 막중한 책임감 느껴야 권력의 감시자, 사회적 약자 대변 요구

시민들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홍보를 강화해서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라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60대의 참가자는 정부구독료를 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커다란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한다”며 광주민주화항쟁을 예로 들며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사안의 일목요연한 정리 가장 절실 〈이슈돋보기〉 개선 및 홍보 고민해야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조사 참가자 대부분은 연합뉴스가 알기 쉽고 간결하게 사안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써주길 원했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가장 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서비스로 ‘시사와 관련된 복잡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어려운 용어와 기사에서 다루지는 사안의 맥락을 짚어주는 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처음 접하는 사안이 왜, 어떻게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를 설명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거의 모든 기사들이 단편적인 사실만을 담고 있어 기사를 모두 찾아 읽기전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연합뉴스가 이런 서비스를 강화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슈돋보기〉를 요약정리한 콘텐츠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대의 조사 대상자는 “다른 언론사는 의견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연합뉴스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40대의 한 참가자는 “요즘 워낙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팩트 체크랑 연결시켜서 사안의 사실적인 부분과 가짜인 부분을 짚 다뤄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들은 ▲ 생활과 밀접한 경제정보 ▲ 국외정세에 대한 정확한 소개 ▲ 상세한 북한생활상 소개 ▲ 외국어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한국인의 생각 전달 ▲ 생활정보 등을 연합뉴스가 더 충실하게 서비스 해주길 희망했다. 특히 홍콩시위나 위구르족 문제 등과 같은 국외문제를 다룰 때 강대국의 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참가자도 있다.

스트레이트 뉴스 강화 더 선호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사실에 기

반한 중립적 기사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심층분석 기사 보다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 이유로 심층분석 기사에는 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심층분석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합뉴스가 심층분석 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집중심층면접 조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3%가 스트레이트 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37%만이 심층분석 기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 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40대의 참가자는 “연합뉴스가 통신사니까 다른 언론사들이 쓰는 기사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다. 팩트기반으로 잘 전달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의 한 참가자는 “심층분석 기사는 기자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연합뉴스는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스트레이트 기사 강화를 꼽은 이유를 들었다. 30대의 참가자는 “제가 연합뉴스를 보는 것은 스트레이트 기사의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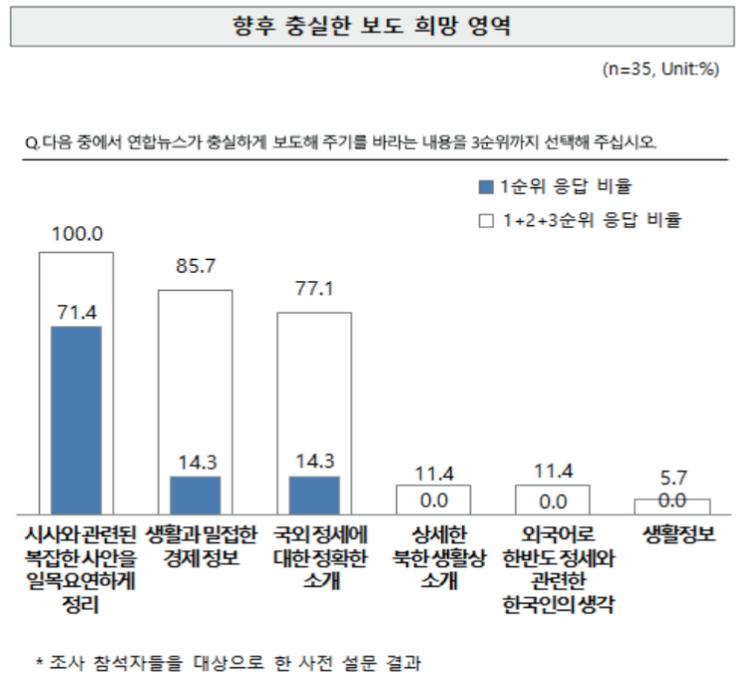
연합뉴스가 선도적으로 심층분석하는 것도 필요

반면 심층분석 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20대의 참가자는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데 일방적이지 않고 여러 의견을 토대로 제시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30대의 참가자도 “어차피 어떤 사안에 대해 가장 처음 접하는 건 연합뉴스일텐데 거기서 분석기사가 있으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50대의 참가자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심층분석)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으며 60대 참가자는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뉴스가 선도적으로 심층분석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참가자는 “단순 뉴스만 전달해 주니까 깊게는 못 들어가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연합뉴스가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대한 기대와 의심 혼재

조사 참가자들은 연합뉴스가 국가를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다른 언론사에 대비해 보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다른 언



론사에 견주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평가와 여전히 친정부 성향을 띠고 특정 대기업에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는 서로 상반된 평가를 하기도 했다. 30대의 한 참가자는 “최대한 정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든다. 정부색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60대 참가자는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으로 볼 때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아직은 시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연합뉴스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실을 보도하려고 더욱 노력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영언론사로서의 핵심 가치 추구해야

연합뉴스는 이제 시민들에게 공영언론사로서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권력과 자본에 예속당하지 않는 공영언론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매번 바뀌는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사임을 분명하게 해야 시민들이 연합뉴스에 갖는 혼란스러운 인식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고객사인 언론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공영언론사로서 고객들인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사에 대한 콘텐츠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콘텐츠도 함께 고민해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콘텐츠 개선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평가조사는 앞으로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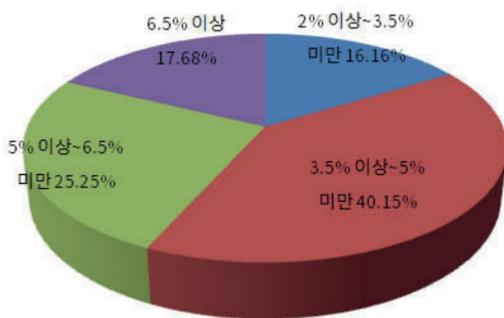
2019년 임금, 총액기준 3.5% 이상은 올라야 상견례 개최로 2019년 임단협 교섭 돌입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실시한 임단협 설문조사에서 올해 총액을 기준으로 3.5% 이상~5% 미만의 범위에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답변한 조합원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40.15%에 해당하는 159명이 이같이 응답했으며 25.25%(100명)의 조합원은 5% 이상~6.5% 미만의 범위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노조 홈페이지에서 경영진 중간평가와 함께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조합원 568명 가운데 396명이 참여해 69.7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올해 임금 인상(총액 대비)이 어느 정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지부가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조합원의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제의 보완점, 단협개정 방향 등에 관한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했다.

임금인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2.27% (207명)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 이후 보상받지 못하는 초과 노동이 많기 때문'이란 답변도 27.53%(109명)에 달했다. '부족한 사내 복리후생비용 충당을 위해'(11.62%), '노동의 양과 강도가 더욱 증가했기 때문에'(7.07%)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은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에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합원 설문조사 이후 2019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위한 노사 상견례가 14일 오후 회사 1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 조정부 사장을 비롯한 연합뉴스 경영진, 연합뉴스지부 집행부 등 노사 양측 교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정훈 위원장은 "연합뉴스지부와

회사가 어려운 파고 속에서 그나마 외부의 따가운 비판, 비난을 덜 받고 지금까지 왔다는 건 노사 협조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임단협 교섭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부 사장은 "교섭은 늦게 시작했지만, 쟁점들을 협의해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며 숨기지 않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노조 쪽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제성 지부장은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한 보상책 마련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상호 존중과 노사 상생의 정신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회사 측에 당부했다.

상견례 이후 노사실무교섭단은 향후 교섭일정을 논의하면서 임단협 교섭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조합원 대다수 "기본급 인상을 최우선 논의해야"

조합원들 대다수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협에서의 중점 논의사항(복수응답)을 질문한 결과 69.19%인 274명이 기본급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말 격려금 지급'(36.62%), '연장·휴일·야간수당 시급 인상'(31.31%)을 우선해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최근 1년간 노동의 가장 큰 변화를 업무 부담과 수당 실수령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물은 결과, 업무 부담은 늘고 실수령액은 줄었다는 응답자가 30.56%(121명)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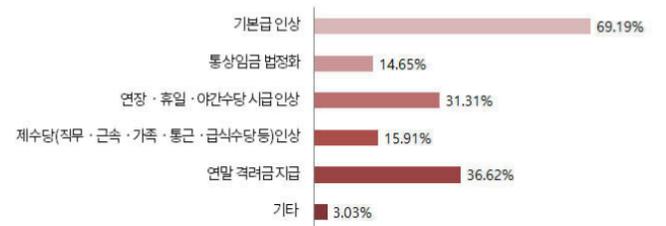
이어 4명 중 1명 이상(27.27%)은 업무 부담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은 줄었다고 답변했다.

실수령액이 줄었다는 조합원이 대부분인 반면, 업무부담은 줄고 실수령액은 늘었다는 응답은 1.01%(4명)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회사 분위기나 부서장 눈치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으로 입력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엇갈렸다.

대체로 없다(37.37%), 전혀 없다(16.16%) 등 '없다'는 쪽이 '가끔 있다'(31.82%), '자주 있다'(13.38%) 등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약간 더 많았다.

2019년 임금 협상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연장·야간·휴일수당 시급 인상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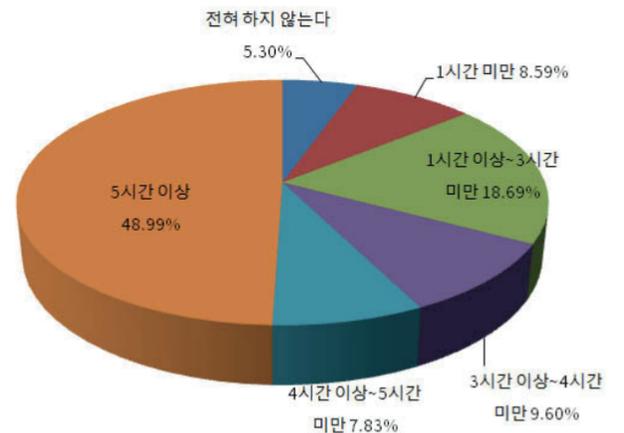
수당의 시급 기준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절대적이었다.

현재 8,000원(50% 가산시 12,000원)인 평일연장 시급을 1만 1천원 이상으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노동에 대한 야간시급과 토·일요일 노동에 대한 휴일시급은 현재 1만 4천원에서 1만 7천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장시간 연장 노동에 시달려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조합원은 여전히 장시간 연장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월평균 연장노동을 얼마나 하십니까?(소정노동시간 = 8시간)



월평균 연장 노동 실태를 물은 결과 '5시간 이상 한다'는 응답자가 48.99%로 가장 많은 반면 '전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3%에 불과했다.

이어 '1시간 이상~3시간 미만'(18.69%), '3시간 이상~4시간 미만'(9.6%), '4시간 이상~5시간 미만'(7.83%) 등의 답변이 나왔다.

주말·공휴일 근무는 평균적으로 월 2~3회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일 이상'(11.11%)과 '전혀 안 한다'(13.64%)를 제외하고 한달 기준 '1~2일'(48.23%), '3~4일'(26.26%) 일하는 조합원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잠정합의안 이후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보완 방향(복수응답)으로는 일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그림자 노동'에 대한 보상책이 첫손에 꼽혔다.

응답자 10명 중 6명(59.6%)이 주 최대 52시간을 넘는 초과노동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



박노황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 공판 2차례 열려

전 조합간부 지방발령 부당노동행위 vs 정당한 업무 맞서

전 에디터 3명, 행정소송도 진행중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피소된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의 두 번째 공판이 11월 5일 오후 4시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박 전 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 뉴스지부가 2017년 10월 박 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지 1년 9개월만이었다.

지난 9월 24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사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만 주고 받은 채 약 30여 분 만에 끝났다. 세 번째 공판은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병설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 공판 2시간 넘게 열려

지난 11월 5일 2시간 넘게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는 연합뉴스지부 제29대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이주영 IT의료과학부 부장이 검찰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조복래 전 콘텐츠융합상무, 신삼호 전 연합뉴스TV 상무 등이 이날 공판을 방청했다.

박 전 사장과 주식회사 연합뉴스도 함께 기소돼 연합뉴스를 대표해서 조성부 사장이 두 번의 공판에 모두 출석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조 사장은 회사는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개입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 81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등이다.

노조법 위반혐의 4가지

박 전사장이 2015년 5월 회사간부 대상 워크숍에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며 노조를 위협하고 협조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열린 편집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노조를 사유화 한다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이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17년 4월 노조 집행부와 상견례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언급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자를 사람은 자르고 규율에 어긋나는 사람은 강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박 전 사장이 노조원의 신분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이 또한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2012년 연합뉴스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과 전 노조 공정정보위원회 간사를 아무런 혐의도 없이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한 것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준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간부사원 연봉제 전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노조법 위반 이외에도 2015년 8월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원의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첫 번째 공판에서 박 전 사장의 변호인들은 워크숍 발언은 일부 노조원이 노조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회사의 암적 요소이지 공소사실처럼 노조 자체가 암적이라 제거해야 한다는 발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편집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력해서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였지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 상견례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지방발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이며 간부사원의 연봉제 전환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전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방발령이 부당노동행위인데다 노조 활동 및 2012년 파업 주도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 입증에 주력했고, 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들의 지방발령이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박 전 사장의 노조를 적대시하는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노조활동과 회사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변호인은 당시에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전 에디터 3명의 행정소송도 진행중

한편 박 전 사장 공판과 별도로 지난해 회사로부터 공정보도 훼손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간부들에 대한 행정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황두형 전 외국어에디터, 황대일 전 전국사회에디터, 황정욱 전 정치에디터 등 3명은 지난해 혁신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보도 훼손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 3~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보도 훼손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회사가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원고인 회사 측은 이들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피고인 황 전 에디터 등 3명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며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일 속개된 변론에서 양측에 증거자료와 반박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12월 19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7면에 이어

다고 답변한 것이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인상’(32.58%), ‘현재 5.5시간으로 상한선이 설정된 재택근무의 상한선 폐지’(17.68%), ‘철야노동의 경우 가산분을 실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17.17%), ‘부서장 및 간부사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제 적용’(16.41%)을 요구하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았다.

단체협약의 개정 방향(복수응답)에 대한 의견은 고르게 나타났다.

여러 의견 가운데 ‘인사이동시 원치 않는 부서에 가는 경우, 못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35.86%)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경조휴가, 재충전휴가 등 보완’(33.33%), ‘달라진 출산 육아기 정책 반영 및 출산·육아와 관련해 사내문화 개선’(32.32%), ‘편집총국장제 내실화를 위한 제도 보완’(31.06%),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영’(23.74%) 등을 요구하는 조합원들도 많았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특목고·자

사고 학비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53.03%(210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미 다니고 있는 특목고·자사고 재학생에 대한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19.95%), ‘특목고·자사고 교육비 지원도 폐지해야 한다’(15.15%), ‘고등학교 교육지원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7.32%)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노조에 바라는 점으로는 임금 인상과 격려금 등 임단협에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과 함께 공정보도·편집권 독립 강화,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미혼·무자녀 사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 육아휴직·휴가·병가 제도 개선, 통신티비·교통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노사는 2018년 잠정합의안 이후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